

국내 최대 400MW 태양광단지 해남에 조성한다

착공식 개최...유희부지 479만㎡ 활용·28년 준공 목표
RE100 기업에 무탄소 전력 공급...발전수의 지역 환원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에 들어선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룰 핵심 프로젝트로 육성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해남군에서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박지원 국회의원, 고광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명현관 해남군수,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 지역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가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공급 확대 정책의 첫 대형 사업 가운데 하나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 발전원가 절감, 지역주민 이

익 공유를 함께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염해간척지 등 유희부지 약 479만㎡에 단일 부지 기준 국내 최대인 4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10MW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조성해 농업과 재생에너지 생산이 공존하는 모델도 함께 실증할 계획이다.

주요 설비에는 국산 모듈과 셀, 인버터 등을 적용해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또한 활용도가 낮았던 대규모 유희부지를 사업부지로 활용해 발전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상생 방안도 포함됐다.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 체계를 마련해 사업 기간 동안 약 1500억원 규모의 발전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설계와 조달, 시공, 유지관리 과정에서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7일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서 열린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소 착공식’ 행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주요 내·외빈들과 착공을 기념하는 시삽을 하고 있다.

도 지역 기업과 주민 참여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발전단지가 준공되면 연간 529GWh 규모의 무탄소 전력을 생산해 약 13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생산된 전력은 RE100 참여 기업과 산업단

지 등에 공급될 예정으로, 기업들의 탄소 중립 대응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K하이닉스 등 첨단 반도체 기업과 솔라시도 AI 국가컴퓨팅센터 등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와 해남군이 추진 중인 ‘솔라시도 AI 에너지신도시’ 조성에도 힘을 보태 기업 유치와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남 태양광 발전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성장, 국내 태양광 산업 육성을 함께 실

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유희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발전단가를 낮추고,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50만 당원’ 호남의 표심은...민주당 전대 ‘초집전’ 누굴 선택할까

내일부터 온라인투표...전남광주·전북 15일 합동연설회
송영길·김민석·정청래 당대표 후보 텃밭 민심잡기 사활
권리당원 30% 승부 결정...선호투표제 ‘2순위표’도 촉각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의 승부처가 될 호남지역 순회경선의 막이 올랐다. 권리당원의 30% 이상이 몰린 텃밭 호남에서 승기를 잡는다면 수도권 당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정권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8면 특히 계파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호남지역 2순위표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호남지역 순회경선 합동연설회가 15일 열리는 가운데 호남권 온라인 투표가 11~14일 진행

된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은 약 50만명으로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152만명의 약 30%를 차지한다.

경기·서울(약58만명)의 권리당원과 합치면 71% 수준으로, 양 지역의 경선 결과가 당권 경쟁의 승부를 좌우하는 것과 다를 없다.

때문에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기호순)가 잇따라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표심을 다졌다.

인천·제주 순회경선 전날인 지난 7일

에도 송영길 후보는 광주를 찾아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오월어머니집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고, 김민석 후보는 목포, 영광 등 전남 중서부권을 찾아 현안 간담회와 강연회, 토론회를 가졌다. 정청래 후보는 전북과 순전을 오가는 일정을 소화했다.

이처럼 텃밭 호남에서의 경쟁이 막이 오른 가운데 지역 사이에서의 표심 차이도 감지되고 있다.

광주특별시장에서는 국회의원 18명 중 14명이 ‘진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면서 진명 당권 주자를 지원하는 조직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북은 10명의 국회의원 진명과 ‘친청계(친정청래계)’ 비율이 절반으로, 지역위원회별 지지세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호남 순회경선에서의 전남광주와 전북의 결과

가 다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고위원 경선도 박선원(나주), 서미화(무안) 등 전남광주 출신 후보는 친명계, 한민수(익산), 이성윤(고창) 전북 출신 후보는 친청계로 분류되면서 지역 간 대립 구도도 형성돼 당대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선호투표제로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호남 순회경선이 후보들의 당력의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최종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위 후보를 선택한 당원들의 2순위 표가 재배분되기 때문이다.

호남에서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에 2순위표가 갈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들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로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투표에 참여하는 권리당원의 수가

많은 점도 2순위표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권리당원이 역대급으로 모집되는 지방선거 이후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이다.

이에 친명 주자들은 호남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직을 총가동했고, 정청래 후보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아울러 호남 순회경선에서의 결과가 서울·경기 순회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 당권 주자들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호남에서의 성적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친명, 친청 사이의 계파 갈등이 깊어진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특별시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설치 건의 “최대 전력수요 예측범위 벗어나도 즉시 대응”

기후부에 전달...해상풍력 최대 생산기지·전력기관 집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발전공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 통합 발전 5사의 본사를 통합특별시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건의다. 지난 6월 유치성명서의 논리를 보완·발전시켜 통합특별시 차원의 유치 논리를 정립해 정부에 전달했다.

통합특별시는 발전공기업 통합이 단순한 기관 통폐합을 넘어 에너지 대전환과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발전공기업이 새로운 역할과 경영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인 광주특별시에 현장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는 유치 근거로 먼저 통합 발전공기업의 32GW 규모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정의로온 전원의 최적 대안인 대규모 해상풍력의 최대 생산기지라는 점을 제시했다.

현재 발전공기업 4사가 3.8GW 규모의

11개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석탄발전소 대규모 운영 인력을 해상풍력 유지보수 인력 등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특별시를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실행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옛 전남 전역이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조성 중이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 지정도 가장 유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KDN, 한전KPS 등 국가 전력산업 핵심 공공기관이 집적돼 정책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또 한국에너지공대와 4대 국가 에너지 특구 등 에너지 생산부터 연구개발, 인력양성까지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전주기 산업생태계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통합특별시는 896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RE100 전력 공급 모델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미래 첨단산업의 중심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

기후부,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

이번주부터 산업체 조업률 회복

수요 증가 전망...비상체계 가동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전력 수요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7일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거래소를 찾아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고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전력수급 운영 현황과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전력수급을 전파하고 발전기와 송변전설비 운영 현황, 기관별 비상대응체계, 추가 예비자원 확보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력 당국은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는 8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전력거래소를 찾아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폭염·열대야가 장기간 지속되면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전력수요(97.1GW)를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통해 읊어줄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능력을 이미 확보해 놓은 만큼,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 급증이나 발전설비 연쇄 고장이 없다면 안정적인 예비력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력 유관기관은 폭염·집중

호우에 취약한 설비를 지속 점검하고, 설비 고장 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비상복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폭염에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상과 전력수요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요 급증과 발전기 고장 등 상황별 대응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무리한 야와 작업을 지양하고 충분한 휴식과 작업시간 조정 등 폭염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2000만원 기부시 ‘560만원’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확대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지방의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담배품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부지역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지방에 기부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기타 비수도권 지역에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를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기존 44%에서 55%로 높아진다. 2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27.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341만1000원에서 56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방에 대한 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지방 우대제수가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보다 10~50% 늘어난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하고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길 경우 지급하는 이주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별도 세제지원도 적용된다.

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다. 지방에 기업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훈 기자 photo25@